

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추진배경

비전과 추진전략

부문별 정책과제

향후 추진 일정



I

추진배경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왜 2단계 정책이 필요한가?

그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중점

- 공공부문 주도의 국가기관 이전, 행복·혁신·기업도시 건설
- 인재·기술·산업이 결합된 내재적 지역혁신 역량 강화
 - ▶ 비수도권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등 성과



수도권

〈참고〉 한미 FTA와 국가균형발전

단기적으로는 업종별·지역별로 효과 상이

- 직접적 수혜는 대미수출업종 밀집지역에 발생

- ★ 자동차(울산·충남·광주), 자동차부품(경남·경북·전북)
항만물류(부산·인천), 기계(부산·경남·경북), 철강(경북·전남)

-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어려움 호소



중장기적으로 FTA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

- 투자환경 및 대미교역 환경 개선 등 외국인투자 증대 기대

- FTA 계기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
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발판 마련

- ★ 2단계 균형발전정책, 낙후지역발전대책 등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[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[06. 9.19/10.17]

-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, 복지·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
[06.11.2, 제3기 균형위 출범시]

-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
[06.11.29, 누리사업성과보고회]

3. 추진경위



1. 추진경위



2. 추진경위



3. 추진경위



4. 추진경위



5. 추진경위



6. 추진경위



Ⅱ

비전과 추진전략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억하기 좋은 삶, 기억 좋은 지방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환경 ·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

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

- 지역발전 정도,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
 - 분류[안] : 발전지역, 성장지역, 정체지역
- 지역분류,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
3. 추진과제 : 2대 부문 14개 과제

정책
부문



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-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- 2 인력난 해소
- 3 산업용지 공급 확대
- 4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-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-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
- 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

정책
과제

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- 1 고품질 주택 공급
- 2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-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-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-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-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-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Ⅲ

부문별 정책과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 · 이전 ·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· 인력 · 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 · 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[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]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② 인력난 해소

●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- **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**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●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

-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을 집중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

● **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**

-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
 - ※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
- 혁신/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
 - [예] 평당 연간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임대기간 : 50년



● **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**

-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- * 국무총리 소속의 「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」 (가칭)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
-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④ 경제자유구역 ·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
- **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방에 외자유치 확대**
- **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출기업 및 지역경제 육성**

※ **현행 세제 지원(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) : 법인세 3년 100% 그후 2년 50%**

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
- **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 이전시
상업적 도시개발 허용**

**[예] 1,000명이상 고용기업에 100만평 규모 이내의
도시개발 허용**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-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
-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등



⑦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- **기업경영 및 종업원 생활여건 개선 등 포괄적 지원대책 마련**
 - 기업경영 애로사항 : 용지확보, 공장설립, 종업원 교육 등
 - 종업원 생활여건 : 주택·교육·보육 등
- **종합패키지 지원시스템 구축**
 - 관계부처·지자체·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·운영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정채방향
오기오오

-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
-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① 고품질 주택 공급

- **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**
 -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 -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[현행 2년] 대폭 연장
- **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**
 -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- **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**
 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[도로, 상하수도 등] 지원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

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•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

- 이공계열 : 국가 장학금 지방 지원비율 확대(35%→60%)
- 인문계열 : 지방대학에 이공계와 동일조건으로 학비 지원



현행 선발기준(대신성적 상위 20%, 수능성적 2등급) 완화

신세대 취향에 맞게 독립형 주거공간이 확보되는

기숙사 확충

단체생활형 개인/가족형

2. 살기 좋은 새하얀거 주소

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-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 -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
 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
- **중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**
 -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
 - [예] 인사교류 · 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(MOU)체결
 - 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 · 운영 등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④

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지역보건소

1차 진료
지역의료건강센터

지방의료원

2차 지역거점
의료기관으로 육성

지방국립대 병원

3차 의료기관으로
특화 발전 유도

-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

조미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-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
 -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수준으로 확대
 - ※ '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: 36.2%

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-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



IV. 향후 추진일정



- ## 🍌 2단계 구상 발표



- ## 2단계 세부추진계획 마련·확정



- '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



- ## 🍌 법안 국회 제출



감사합니다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